

APEC 정상회담과 북핵문제

김 국 신

통일연구원 · 동북아연구실장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은 11월 17~1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북핵문제·자유무역·테러리즘·통상현안 등에 관해 협의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일본·중국·러시아 4강과 베트남·캐나다 등 6개국과 개별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또한 이와 별도로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갖고 6자회담 관련 입장을 조율하였다.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17일 정상회담에서 작년 4차 6자회담에서 채택한 9.19 공동성명의 조기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미 양측이 많은 접촉을 갖고 신축성을 보이면서 핵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18일 연쇄적으로 개최된 한·미, 한·일 양자회담과 한·미·일 3자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따른 9.19 공동성명 이행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 대북 경제지원과 안전보장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동석해 이어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3국 정상은 대북제재 압력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폐기시 6자회담 당사국들의 상응하는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19일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핵 불용 원칙 아래 북한에 대한 압력과 대화를 병행하는 접근법이 중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이 날 발표된 APEC 의장 구두 성명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의지를 재천명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와 6자회담 9.19 공동성명 이행을 촉구하였다.

미국 백악관의 토니 스노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록 중에는 한국전의 종료를 선언하고 경제 협력과 문화, 교육 등 분야에서의 유대를 강화하는 게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한국전 종료를 선언한다는 것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은 평화협정을 제안함으로써 북핵문제를 보다 전향적인 자세에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중순께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6자회담이 개최되면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조치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9.19 공동성명에 합의한 바와 같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고 핵확산방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복귀하면, 이에 상응하여 다른 참가국들도 에너지 제공 등 대북 경제지원을 실시하고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9.19 공동성명의 제4항은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했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폐기 의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협정에 관한 논의는 무의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먼저 영변 5MW 원자로 등 핵시설 일부를 폐기하는 선행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구체적인 핵폐기 조치를 취하여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가시화될 경우 협상 당사자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남한은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평화협정은 북·미간에 체결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평화협정을 체결할 시점에 이르면 우리 정부는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어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만약 북한이 기존의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북·미 평화협정을 고집한다면 이는 6자회담에 추가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